김현미 장관, "버스 공공성·안전강화대책은 곧 1만 5천 일자리" 강조 27일 노사정 합의문 체결…지속 협력 통한 차질 없는 이행 당부

- 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7일(목) 11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김기성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 회장과 「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」의 이행 합의문 체결식을 하였다.
- 이번 합의문 체결식은 지난 5월 31일 체결한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의 후속 조치 후 마련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사정이 지속 협력하자는 취지 에서 개최되었다.
- 그간 국토교통부는 버스업계 운수종사자는 물론 시민단체,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버스 운영체계 개편 지원 등 중앙정부 역할강화, 운전인력 양성 확대,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버스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.
- □ 이 자리에서 김장관은 "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준 노사 관계자께 감사드리며, 국민들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해 대책 이행과정에서 노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"한다면서,
- 아울러, "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12월까지 약 3,300명의 운전인력이 신규 채용되었다."면서, "앞으로 본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업계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'일자리 함께하기' 사업을 적극 활용할 경우 향후 약 1.5만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."고 밝혔다.

2018. 12. 27.(목) 국토교통부 대변인